

순천대 학생들 통합 반대 ... 전남국립의대 차질 우려

학생 찬성을 50% 확보 못해
목포대와 통합 무산 가능성
통합 심사 중 악재에 큰 충격
내년 1월 13일까지 변수는 남아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이 순천대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두 대학 통합은 물론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라는 국정 과제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대학 통합을 묻는 천만 전지투표에서 순천대 학교 학생 3658명 중 2062명(60.8%)이 대학 통합에 반대, 찬성을 38.32%를 기록하면서 통합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순천대는 교원과 직원·조교, 학생 등 세 직역에서 찬성을 50% 이상을 대학 통합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교원과 직원·조교는 각각 56.12%(찬성 156표·반대 122표), 80.07%(찬성 245표·반대 61표)를 기록한 반면, 학생에서 찬성을 50%를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3개 직역 중 2개 이상에서 찬성을 50% 이상일

경우 통과로 설정한 목표대는 투표 결과, 3개 직역에서 모두 찬성을 50%를 넘어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30년 숙원사업인 전남 국립의대가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한 만큼, 순천대의 반대로 두 대학 통합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마지막으로 예정된 11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대통령실이 전남 국립의대 2027년도 개교에 힘을 보태기로 한 만큼, 의대정원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태였다.

이율러 두 대학의 통합을 심사 중인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지난 18일 마지막 9차 심사를 마쳐 투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다만, 두 대학의 최종 통합 여부에 대한 심사위 결정 기한은 오는 1월 13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순천대 구성원의 찬성을 통합 등의 기준을 넘어서다면 통합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투표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투표 결과에 담긴 여러분의 뜻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의대 신설을 이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성탄절 케익 만들어요"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광주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요리활동 시간에 부모님께 드릴 자신만의 특색있는 생크림 케익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일자리 '미스매치' ... 광주 고용시장 '찬바람'

청년 구직자 절반이 '공공기관' 선호...제조업 등 산업현장 '구인난'

"월급 300만원 받아야" vs "현실은 200만원대"... 눈높이 차이 여전

2025 광주시 일자리인식실태조사

광주시민이 바라는 '일자리'와 지역 산업 현장이 제공하는 '현실적인 일자리' 사이의 간극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5면

청년층은 여전히 좁은 공무원·취업 문만 바라보고 있고, 중소기업과 제조업 현장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최근 내놓은 '2025 광주시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결과다. 조사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 4905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기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임금 노동자들이 느끼는 '월급 수준'에 대한 같증이었다.

직장 생활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임금 및 소득' 분야 점수는 5점 만점에 3.2점에 머물렀다.

노동자들이 현재 손에 쥐는 월급 봉투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방증이다.

임금 노동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바라는 월평균 임금은 약 298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현재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 분포를 보면 200만~300만원 미만 구간이 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00만~400만원 미만은 26.9%에 그쳤다.

구직자들은 최소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원하지만, 지역 기업 상당수는 200만원대 임금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구직 과정에서 일자리를 제안받고 도 거절한 주된 이유로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38.3%)가 1위를 차지했다.

청년층의 공공부문 채용 현상은 이번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취업을 희망하는 19~34세 청년층 가운데 32.8%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원한다고 답했다.

반면 지역 경제의 하리인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14.1%에 불과했다.

공기업(12.5%)까지 합하면 청년 구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공 영역 진입을 희망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실제 청년층 미취업자의 29.1%가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이나 도서관 등에 다녔다'고 답해, 타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았다.

좁은 취업 문을 뚫기 위해 수년씩 '고시 낭인' 생활을 자처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쉬었음' 상태로 머무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산업 구조도 여전히 제조업(13.9%)과 도소매업(12.0%) 등 전통업종 위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나 '정보통신업'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자리 불일치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무 종사자'(31.5%)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과 달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원(5.0%)이나 기계 조작직(2.5%)을 희망하는 비율은 바닥권이었다.

제조업 현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청년들을 현장으로 유인하기란 요원해 보인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근로자 중 7.7%는 현재 자신의 일자리를 '일시적'이라고 답했는데,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19~34세 청년층에서 이 비율이 12.9%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지역 청년들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계약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시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63.9%는 이직을 희망하고 있어,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하고 있다.

일자리와 희망 일자리 간 일치도 조사에서 '연봉 및 복리후생' 부문 점수가 4점 만점에 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민들은 광주의 일자리가 자신들이 원하는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로 이어지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분석된다.

지역의 노동문제 전문가는 "단순히 고용률 수치를 높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실질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크리스마스엔 하얀 패딩을...광주·전남 강추위에 눈·비

크리스마스인 25일 광주·전남 지역에는 강추위를 동반해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춥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25일 오후 3시부터 광주와 나주, 장성, 영광, 함평, 목포, 무안, 영암, 진도, 신안 등 전남 서부지역에 1cm 안팎 눈이 내리거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 서해안에

도 1~3cm 눈이 내리겠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은 새벽까지 내린 비로 대체로 흐리다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25일부터는 광주·전남 전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3~3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를 보이고, 26일 아침 기온은 영하9~영하3도로 격차를 벌어들여 낮 최고기온도 영하1~3도로 0도 인근의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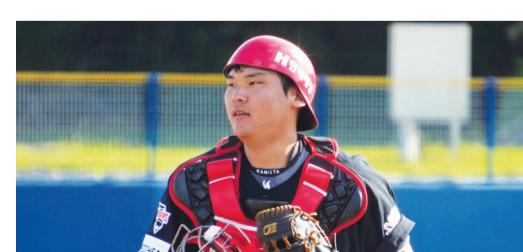
내일 성탄절 신문입니다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 폐쇄 추진

▶2면

KIA 권다결 "포수는 내 운명"

▶18면



일하는 청년 빛나는 미래 - 광주광산경찰서

▶22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 배치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의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 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달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